"다문화 사회일수록 必要 아닌 必須"
〈필요〉 〈필수〉

① 시대적 요청 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10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대 대선후보자들에게 보낸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론이 '필요(必要)에서 당위(當爲)'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불어 닥친 '동성애 논란'에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도 4월 27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10대 인권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이 19대 대통령과 20대 국회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번 동성애 논란 뿐 아니라 차별의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지난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사건을 접하며 한국사회 내 고질적인 네포티즘(친족중용주의 혹은 족벌주의)에 환멸을 느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출신·성별·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또한 여성혐오, 노인혐오, 장애인 학대 등 일련의 사건을 접하며 차별범죄에 언젠가 자신도 노출될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 명이 차별을 당하면 당사자와 가족, 연인, 주변인들까지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는 것"이라며 "시대가 발전할수록 차별을 차이로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한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권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차별과 관련한 법이 있다. 하지만 구속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만큼 이들을 모두 포괄해 보호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 형태,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UN인권이사회는 2007년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후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해왔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당장 차별을 근절시킬 수는 없어도 불합리한 차별은 부당한 것이며 차별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단 인식을 사회적으로 심어줄 수 있고, 점진적으로 차별금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차별에 대한 법적책임 근거를 마련하면 강제력이 커진다. 법안이 공포되면 사람들에게 법을 위반해선 안 된단 인식을 심어준다"며 "시간이 흐르면 차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의식들이 사회에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국민적 관심·요청 확산
잇따른 족벌주의·혐오범죄 등 접하며
'나도 차별받을 수 있다'는 자각 형성

외노자, 결혼이주민 등 新구성원 증가
모두 포괄할 차별금지법안 필요성 증대
불교, 신도교육 등 적극 계도 나서야

또한 박 교수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세부적인 처벌규정도 마련된다. 이후 판례가 쌓일수록 사회적 구속력이 커질 것"이라며 "차별범죄에 대한 판례가 인권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청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미 국민의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2013년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2007년 이후 수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 집단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성소수자를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보수 개신교 집단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란 반박과 더불어, 특정 교리에 입각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높다.

박 교수는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순 있으나 그 정도가 과도해 범죄로 이어진다면 법적 제재를 가해야한다"며 "중간지대가 넓을수록 안정된 사회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생성돼야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특정대상에 대한 보호제도가 아닌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해 모두의 인권을 신장하자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상대를 인정, 배려할 때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신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류상태 목사(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보수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2000~3000년 전 기록된 성경에 따른다. 당시엔 성소수자 뿐 아니라 여자,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한 것처럼 적혀있다. 당시 의식 수준이 반영된 것일 뿐 신의 말씀이 아니다"며 "하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인류애를 펼치셨다. 현재 보수 개신교 집단은 왜곡된 시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불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란 2017년 종무기조 아래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천명한 조계종이 더욱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한단 요청이다.

박 교수는 "조계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웃종교보다 포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란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요사찰 신도교육 주제로 '차별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필요성' 등을 삼고 재가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종단 소임자 및 주지 스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아름 기자

"차별 존재하는 한, 누구라도 받을 수 있어"

Interview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요?'



Q 차별금지법은 왜 제정돼야 하나요?
A 대한민국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변했습니다. 신분제가 있던 군주 국가에서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적폐와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불교계는 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할까요?
A 부처님은 당시 인도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부정하셨습니다. 계급을 가리지 않고 제자로 받으시며 "사람의 고귀하다. 천함은 혈통이나 신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한국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등과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Q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만연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A 법은 그 시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제정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된 우리나라에서 고질적 차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초석이 될 것입니다.

법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차별금지법이 제정 후에도 사회 개선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법이 있음으로 인해 공적 규제가 발생하고 이로서 '차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차별은 단일한 분야를 이유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며 '장애인', '장애인'이며 '특정 종교 종교인(신도 포함)', '남성 또는 여성'이며 '저학력' 등 복합적인 분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사회적인 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별적 법안 구성이 아닌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Q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또 궁극적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차별 없는 세상은 불자들이 염원하는 불국토의 한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후 계급제 등 당시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거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를 이룰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문을 듣다 보면 모든 생명을 '부처'로 대하라는 요지의 설법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차별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한 한 생명이자 한 인격체로 맞이할 때, 다름을 '틀림'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할 때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한불교 총화종

불기2561(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종 정 전남정

부 종 정 이남은. 최만재 총무원장 김혜각

종회의장 백만우 종회부의장 정경옹 교 육 원 장 김법만 호계원장 이만오
감찰원장 김혜암 포 교 원 장 김기태 문 화 원 장 이지수 선 원 장 신본원 복지원장 김지산

사회부장 성조향 호법부장 박지광 재무부장 김지오 교무부장 윤해원 조직부장 빈성혜
조사부장 김지현 문화부장 양혜원

서울북종무원장 이혜인 경기동,남종무원장 김법만 기 서 종 무 원 장 김혜암
대 전 종 무 원 장 김해송 울 산 종 무 원 장 백만우 강원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경남동종무원장 이광덕 경남서종무원장 김월광 강원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전남,광주종무원장 김현산 제 주 종 무 원 장 김청해 부 산 종 무 원 장 박지광

유 발 승 회 장 이지수 유 발 승 총 무 전지명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봉 축 사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함께 행복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은 저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 거룩한 날입니다. 부처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쁜날입니다.
오늘 참 좋은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부처님 가피력으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하시도록 합장기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 부처님입니다. 더불어 재미있게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부처님께 발원합시다. 자비와 지혜충만하신 부처님!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사바세계가 극락세계로 이루어 지도록 세상을 바로보고 자기를 바로보는 크나큰 진리속에서 우리 함께 길이길이 부처님 가피력으로 더불어 함께 모두 행복을 찾읍시다.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93번지 2층
전화 02)743-0066, 8338 / 팩스 02)743-8448
www.chonghwajong.or